

‘박근혜 재판’ 등 공익사건 판결 생중계 가능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연예인 사건 등 단순 관심 높은 사건은 배제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 제한토록 규정 개정 규칙 8월1일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중계방송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법관 회의는 지난 20일 같은 내용을 논의했지만, 중계 허용 범위와 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현행 규칙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 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

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해당 규칙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재판 공개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았다.

이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판사들 중 약 68%(687명)가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과정 전부나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 규칙은 8월1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 알 권리” vs “인권 침해”

‘朴 재판 생중계’ 허용에 여야 반응 제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판결 모습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각당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 생중계 민주당·한국당, 전직 대통령 재판 공개에 다른 목소리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피고인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피고인의 인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당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자기들이 좇아내고 집권하고 자기들 할 거 다 했는데 이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건 좀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민재판을 벌써 한 번 받았는데 다시 공개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인민재판을 한 번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 거 도리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재판 받는 분의 인권적인 문제 또는 개인적인 여러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이 잘못해서 사법부 풀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인 관심을 끄는 법원 1·2심 주요 재판 선고의 생중계가 허용됐다”며 “중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원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손 수석대변인은 “단 헌법재판소와 달리 사실심 법원의 재판이 생중계되는 만큼 담당 법관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며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차원에서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자칫 여론재판화 되지 않도록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지역구감, 미래창조, 전문직업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